

원가 한계에도 정부·국감 칼날… 옴짝달싹 못하는 식품업계

해태제과·웅진식품, 가격 인상 단행
업체 “자력으로 감내 어려운 수준”

환율 안정 등에 인상 명분 애매해져
국감서 식품·유통·외식 송곳 검증
주요 동종 업계, 가격 인상 관망세

국정감사와 정부 사정당국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추석 연휴 직후 밀아내기식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외식 업계가 극심한 눈치 싸움에 빠져들었다. 누적된 원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가격표를 수정하고 나섰지만, 국회의 엄포와 대통령 가격 관련 언급, 세무조사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외통수에 몰린 모양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이달 1일부터 오예스, 휴린불, 포키, 고향만두 등 25개 브랜드 제품 가격을 평균 7.8% 인상했다. 빠세, 허니버터칩 등 5개 브랜드 14개 품목은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중량을 줄이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적용했다. 웅진식품 역시 같은 날부터 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침햇살, 초록매실, 하늘보리 등 20여 개 품목 가격을 평균 7% 올렸다.

올해 초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협력해 라면과 식용유 등 일부 제품 가격을 낮췄던 식품업계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업계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배경에는 한계치에 다다른 원가 부담이 있다. 주요 식품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

니라 환율, 인건비, 에너지 비용, 물류비 등이 복합적으로 올라 자력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원가 부담을 억누르며 인상 결정을 미뤘지만 올려야 할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가격 인상의 명분이 애매해진 시점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되찾았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기준 소맥(SRW) 평균 가격도 9월 한 달간 11.9% 하락하는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작 올리려는 타이밍에 지표가 안정되면서 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처럼 애매해진 명분 속에 가격 인상을 강행하려니 국회와 정부의 사정 칼날이 가로막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삼양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3건(과징금 총 1조 8000억 원대)에 모두 연루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여기에 상반기 마케팅 논란을 겪은 스타벅스(SCCK컴퍼니) 관련 이슈 등 식품·유통계를 향한 국회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어 있다.

외식업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육계 가격 하락에도 차진값이 유지되는

상황을 직접 지적하며 점검을 예고했고, 일부 차진 프라이프라이즈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진행 중이다. 차진업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당시 상승분을 본사가 떠안았고 인건비와 임대료 등 종합 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당국의 시선은 냉담하다.

결국 식품·외식업계는 추가 가격 인상 카드를 선뜻 내밀지 못한 채 팽팽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먼저 가격을 올린 해태제과나 웅진식품과 달리 롯데 등 주요 동종 업체들은 선뜻 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 역시 “올해는 대규모 원료 담합 제재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가격 언급까지 겹쳐 예년보다 국감을 앞둔 긴장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도 종합감사 전까지 국회와 당국의 분위기를 주시하며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삼성DX 노조 사장 만나고, DS 노조는 국감·경찰 수사

DX, 노태문 사장 만나 처우 개선 논의
반도체 어려울 때 DX 기여도 인정해야

DS, 국감서 초기업 노조가 주도한
성과급 합의 형평성·방식 도마위

삼성전자DX 노조가 경영진과 직접 대화에 나선 반면 DS 중심 초기업노조는 위원장 논란이 국감과 경찰 수사로 번지면서 두 부문의 노사 분위기가 더욱 대비되고 있다. 내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DX의 보상 개선과 초기업노조의 운영 투명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전일 동행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대표들을 만나 보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6 테크 포럼’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DX 부문 대표이사 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DX 노조, 경영진과 내년 보상 개선 논의

DX 노조는 지난 5월 임금협약으로 불거진 보상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노사는 DS 부문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DX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동행노조는 신임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경영진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손용호 동행노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 사장을 만나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동행노조는 반도체 업황이 어려울 때 스마트폰·TV·가전 등이 회사를 뒷받침한 만큼 DX의 기여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호 동행노조 운영국장은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회사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행노조는 올해 협상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내년 공동교섭 참여도 추진한다. 다른 노조와 대화해 DX의 입장을 교섭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삼노와의 면담에서도 내년 보상 수준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삼노에 따르면 이호석 위원장은 약 40분간 노 사장과 만나 DX 보상안을 DS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권한을 DX 피플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기업노조, 국감 질타에 경찰 수사까지

DX 노조가 경영진과 보상 개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감에서는 초기업노조가 주도한 성과급 합의의 형평성과 협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DS에 집중된 보상과 DX의 교섭 참여 문제를 비롯해 파업 예고로 회사를 압박했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이었다.

최위원장은 DX의 타결금과 성과급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합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파업을 전제로 협상한 것은 아니며 5~6개월간 교섭 끝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질의를 노조 운영의 투명성으로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에 집회용 조끼 계약을 맡긴 경위 등이 거론되자 최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삼갔다. 대신 내부 집행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액 148.7억弗… ‘역대 최대’

산업부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신고액 역대 3위… 반도체·AI 등 유입

중동 정세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착’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7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FDI 신고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0억 달러, 도착 금액은 30.6% 늘어난 148.7억 달러로 집계됐다.

도착 금액 기준으로는 3분기 누적 역대 1위 실적이다. 이미 신고된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뜻한다. 신고 금액 역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견조한 성장으로, 외국인 투자의 견고한 증가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부·장,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과 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로 외국인 자금이 활발히 흘러들었다.

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가 185.2억 달러(+4.0%)를 기록하며 1분기 감소세(-19.8%)에서 플러스로 반등했다. 기업 지분 인수 및 합병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는 43.8억 달러로 53.1% 급증했다. M&A형 투자 도착은 69.8억 달러로 무려 126.0%나 뛰어올랐다.

업종별 신고 실적에서는 서비스업이 금융·보험(53.6억 달러)과 정보통신(24.3억 달러) 분야의 호조에 힘입어 142.1억 달러(+27.8%)를 기록한 반면, 제조업은 화공 및 전기·전자 분야의 감소 영향으로 57.2

억 달러(-34.5%)에 머물렀다.

김정에 투자유치과장은 “제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많이 감소했지만 기 진출해 있는 기업의 증액 투자는 증가했다”며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장비, 패키징 등 첨단산업 분야로의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도착액도 전년대비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신고 기준으로는 미국이 반도체 소·부·장 및 데이터센터 투자를 앞세워 전년 대비 35.1% 증가한 66.9억 달러를 기록하며 투자를 이끌었다.

산업부는 향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계기로 적극적인 국내외 IR 활동을 전개해 외부 유치 모멘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공정위, ‘44조 석유제품 담합’ 제재 착수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년간 담합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경유·등유 등 국민 생활 필수재인 석유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 절차에 올려졌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가 이어지던 시기 4년간 벌어진 이 담합 행위의 영향권에 든 매출액만 무려 44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석유류 판매 가격 담합 및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정유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 미국-이란 전쟁 직후가

지역 4년 동안 휘발유, 경유, 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 핵심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석유류 판매가격(입금가)을 직접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 사건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총 44조 1000억원(일평균 약 300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정보교환 담합(제9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8주간의 서면 의견 제출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최종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